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81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20년 4월 14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sup>1)</sup>

### I.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의 필요성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을 통한 향후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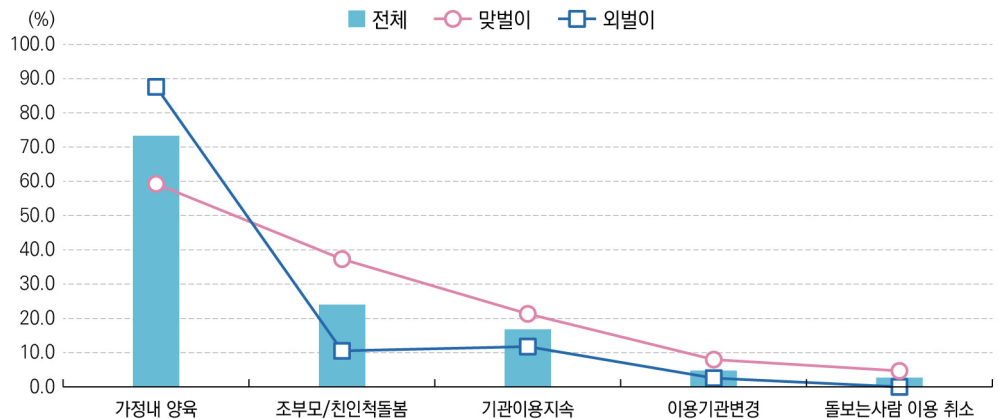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휴업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육아분야에서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함.
  -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개별 가정에서의 자녀돌봄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임.
  - ▶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양육가구의 돌봄 현황을 통해 육아분야 대응체계에 대해 점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한 단기적, 중기적 육아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육아분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 어린이집/유치원/학교/공공기관의 휴원을 통한 집단감염의 방지
  - ▶ 가정내양육이 어려운 경우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의 제공
  - ▶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 이 조사는 부모를 대상으로 3월 25~27일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심각단계를 발표한(2월 23일)지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임.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수시과제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긴급돌봄 지원 방안」(최윤경A, 박원순, 최윤경B, 미발간)에서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만0~8세)를 둔 주 양육자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2020. 3. 25~3. 27) 결과에 근거함.  
- 전국 총 564명의 부모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유의표집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의 자녀양육가구가 과표집(n=110) 됨.  
- 부 60.3%, 모 39.7% / 맞벌이가구 43.8%, 외벌이가구 48.2%, 비경제활동가구 8.0% / 취약가구 8.7%가 조사에 참여

II. 자녀 양육 및 돌봄 현황

휴원 기간 개별가정의 자녀돌봄은 변화없음에서부터 다양한 양육방식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폭이 크고, 자녀의 연령과 가구특성, 지역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임.

- 휴원 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했는지 질문한 결과(낮 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 **그렇다 36.2%, 그렇지않다 63.8%**로 나타남.
  - ▶ **맞벌이가구의 절반(49.4%), 외벌이가구의 21.2%**가 휴원 기간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가구<sup>2)</sup>에서 상대적으로 많음**(특별재난지역 41.8%, 특별재난지역 외 34.8%; 취약가구 46.9%, 비취약가구 35.1%).
- 코로나 상황 전후로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 59.0%, 그렇지않다 41.0%**로 응답됨.
  - ▶ **기관을 다니지 않고 주로 가정내양육을 한다(7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음 24.0%**, **자녀가 다니던 기관 이용을 지속함 16.8%**,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 4.8%**, **돌보는 사람 이용을 그만둠 2.7%**로 나타남(n=333, 중복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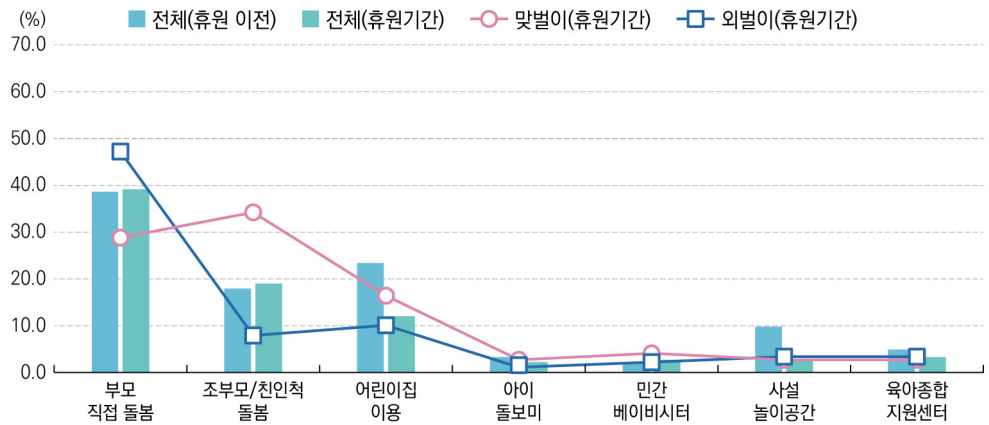
〈그림 1〉 휴원 이후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 실태 - 전체아동(만0~8세)

- ▶ **특별재난지역(63.6% vs. 특별재난지역 외 57.9%), 읍면지역(79.4% vs. 대도시 59.5%, 중소도시 54.5%), 맞벌이가구(60.7% vs. 외벌이가구 56.3%), 취약가구(67.3% vs. 비취약 가구 58.3%)**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와 같은 고용·근로 요인 외에, 가구가 갖는 취약특성과 거주 지역이 코로나에 대한 개별 가구의 대응과 자녀돌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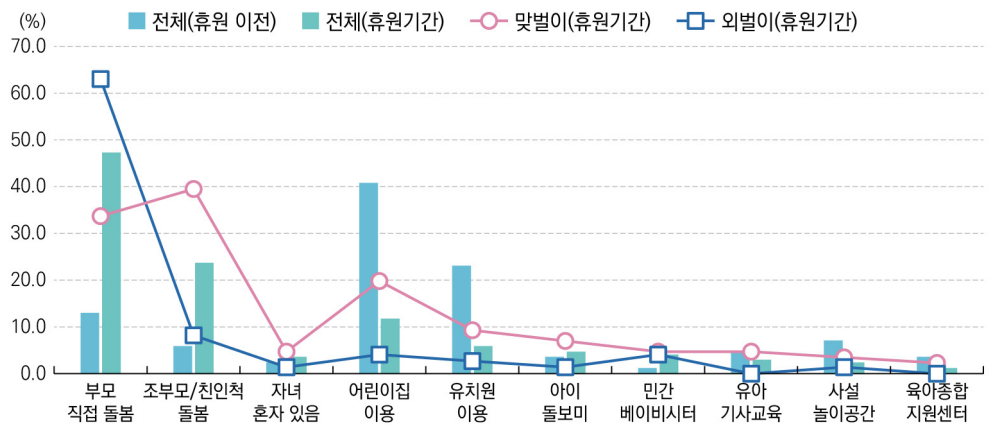
2) 여기서 취약가구는 취약특성(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을 가진 가구를 뜻함(n=49).

자녀에 대한 부모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긴급돌봄의 이용이 주요한 양육지원체계로 작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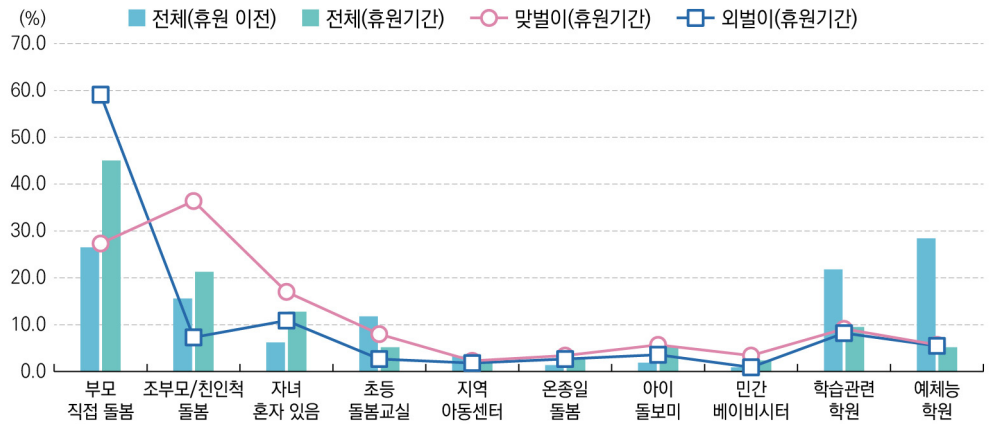
- 취학전 영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긴급돌봄 이용률이 초등저학년에 비해 높음. 영유아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약 25%, 외벌이가구의 약 9% 이상이 긴급돌봄을 이용함.**
  - ▶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영유아 자녀 돌봄에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함(맞벌이가구 37.1%, 외벌이가구 8.0%).
  - ▶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약 10%p 이상 줄어 12.0%로 나타남. 영아자녀에 대한 부모직접양육과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휴원 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 유아자녀가구의 경우 기관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모직접양육의 비율이 30%p 이상 증가함.
  - ▶ 초등 1~3학년 자녀의 경우 부모직접양육과 조부모 돌봄이 증가하고 사교육 이용이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12.8%(6.6%p 증가)**, 사교육 이용이 10% 내외를 보임.
    - 초등자녀에 대한 양육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지, 영유아기에 비해 긴급돌봄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함.



〈그림 2〉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 변화 - 영아(만0~2세) 자녀



〈그림 3〉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 변화 - 유아(만3~5세)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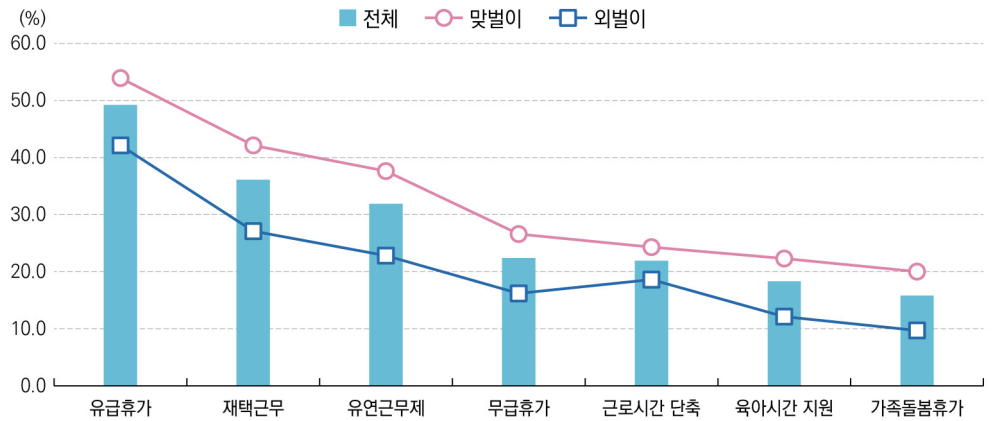


〈그림 4〉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 변화 - 초등1~3학년(만6~8세) 자녀

### Ⅲ.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 및 정책선호도

휴원 기간 자녀돌봄을 위해 유급휴가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30% 이상, 무급휴가 사용이 20% 이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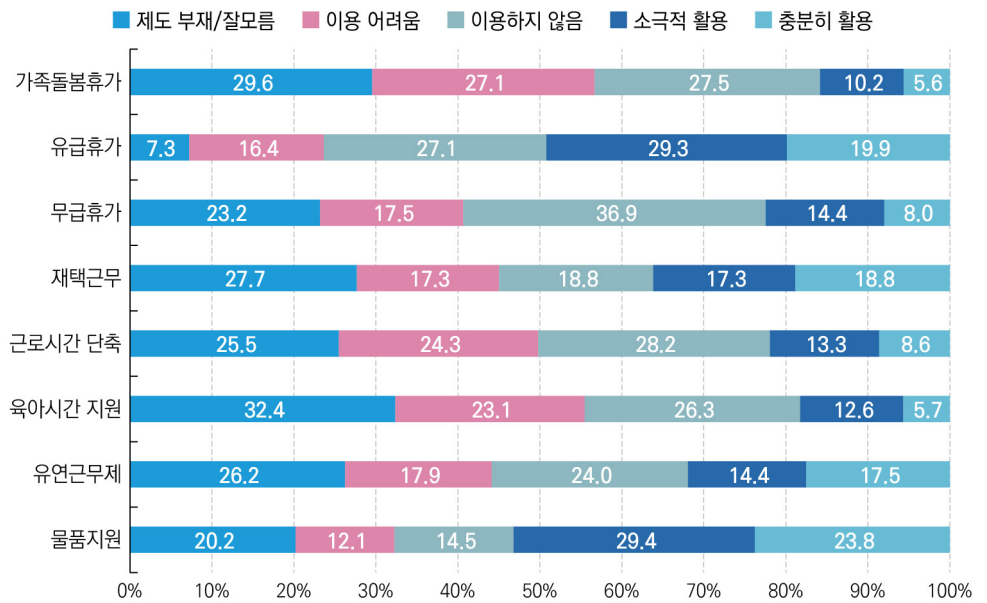
- 휴원 기간 제공된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본인직장 기준, n=284)<sup>3)</sup> 물품지원(53.2%)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sup>3)</sup>
  - ▶ 그 다음으로 유급휴가(49.2%), 재택근무(36.1%), 유연근무제(31.9%), 무급휴가(22.4%), 근로시간단축(21.9%)과 육아시간지원(18.3%)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신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조사참여가구의 15.8%가 이용하였음.



주: 항목별 '소극적+적극적으로 활용' 응답을 합친 결과임. [그림 6] 참조

〈그림 5〉 직장 내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 - 맞벌이/외벌이 가구

3) 본인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에서 항목별로 비해당응답(약 30% 이상)을 제외 후 산출



〈그림 6〉 직장내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 여부

- ▶ 시간지원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이용률이 외벌이가구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으나 외벌이가구의 이용률도 일정수준 이상 나타남.
- ▶ 일하는 부-모의 재택근무와 근로시간단축과 육아시간지원, 가족돌봄휴가 이용 등에서 모의 이용률이 부에 비해 높았음. 부의 이용률도 일정수준 이상(약 15~50%)을 보임.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감염 위험 상황 및 휴원 기간 동안 자녀양육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항목 두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부모직접돌봄(38.1%)’과 ‘아동수당 추가지원(31.4%)’에 대한 응답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돌봄(17.0%)’이 이어짐.
  - ▶ 그 다음으로 ‘재택근무(16.3%)’와 ‘가족돌봄휴가(14.5%)’, ‘유급휴가(12.4%)’,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6.0%)’, ‘유연근무제(4.4%)’, ‘육아시간지원(2.3%)’순으로 응답됨.
    - ‘어린이집 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2%였으며,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은 각 2.0%로 응답됨.

부모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제도와 현재 정책 설계 및 지원·제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재택근무와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에 대한 응답이 일정비율을 보임.

IV. 휴원 기간 대응 및 향후 자녀 등원/등교에 대한 의견

긴급돌봄의 경우, 취약아동지원과 비등원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개원 시 적응 지원,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돌봄휴가 제공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어린이집/유치원/초등돌봄교실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인한 휴원 기간 동안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 15.1%, 보통 27.8%, 그렇다 50.5%로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남(평균 3.51점/5점 척도).
  - ▶ ‘소독·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직원’ 및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긍정응답이 많음.
  - ▶ 상대적으로 ‘취약아동 지원’과 ‘개원/개학 전-후 아동의 적응 지원에 대한 안내와 프로그램’, ‘비등원아동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긍정응답이 적고, ‘교직원 대상 가족돌봄휴가 적용’과 ‘물품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적은 편임.
  -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위험 상황에서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 교사, 나아가 교육과 보육, 돌봄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1〉 긴급돌봄의 대응과 준비에 대한 의견

단위: %

물품지원	소독방역	교직원 보호관리	아동보호 관리	취약아동 지원	가정양육 지원	비등원아동 모니터링	휴원기간 운영	휴원이후 운영재개	교직원 가족 돌봄 휴가 적용	아동적응 지원 안내및 프로그램
19.9	43.6	37.6	37.2	24.8	31.7	23.6	33.0	31.6	20.9	24.6

주: 항목별 잘모름(약 30%내외) 응답 제외. (어느정도+매우잘) 이루어짐 긍정응답을 합침.

개원/개학 시 자녀의 등원/등교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개원/개학을 위한 단계별 적용 방안과 전환 기간의 마련이 필요함.

- 휴원 기간 가정내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16.5%, 보통 41.1%, 잘 이루어졌다 42.4%로 보통과 긍정 평가에 대한 응답이 많음(평균 3.28점/5점 척도).
- 개원/개학 이후 언제 자녀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바로’ 등원/등교시킬 예정 44.5%, ‘가능한 늦게 보낼 예정’ 28.2%, ‘2~3일 상황을 보고’ 16.1%, 개원/개학 1주일 이후 8.9%, 2주일 이후 2.3%로 나타남.
  - ▶ 자녀의 등원/등교 시 감염위험에 대한 부모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원·개학 전-후로 감염예방 지침과 함께,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방역과 적응을 위한 전이(transition)의 과정이 함께 요구됨.

## V. 제언

- ‘휴원 조치’와 가정내양육 최우선 권고 하에서 제한된 ‘긴급돌봄’의 시행에 대해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과 긴급돌봄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음.
  - ▶ 자녀양육가구를 위한 긴급보육실시와 가정내양육지원의 투트랙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됨.
  - ▶ 긴급돌봄 이용 증가가 지속되면 긴급돌봄으로서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감염위험 수준별로 긴급돌봄의 요건과 재원아 구성, 공간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상황에서의 교사대아동 비율 조정, 공간 활용과 수면/식사 등의 사회적 간격 유지 기준, 보육·교육과정 운영 등
  - ▶ 오프라인 개원/개학 시 이전 단계로 일시 복귀가 어려우므로,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예: 신입원아 적응, 가정내양육에서 돌아오는 아동의 바깥놀이 활동 시간 늘려감) 재원아 적응을 위한 전이(transition)의 과정을 마련하도록 함.
  - ▶ 감염위험이 장기화 및 일상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하에서 일상적인 육아지원체계」와 「재난상황의 긴급 육아지원체계」로 재구조화가 요구됨.
    - 지역별로 긴급돌봄의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서비스 이용의 채널을 다변화 하는 「긴급돌봄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 취약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고, 감염상황과 공공인프라의 차이를 고려한 지역별 접근이 요구됨.

최윤경 연구위원 ykchoi@kicce.re.kr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클릭)